

# 양보 없는 與野에 국회 공백 장기화... 법사위 갈등 평행선

與, 행정입법 권한 통제 강한 비판  
野 “여당의 양보안 먼저 내놔야”  
화물연대 파업 등 전혀 대응 못해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97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적 292인 중 재석 252인,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스시스

국회 공백 상태가 길어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후반기원 구성안 협상에서 접점을 못 찾으면서 협상이 점점 찾지 못하고 길어지면서 국회가 해결해야 할 현안도 처리하지 못하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고심이 크다. 그럼에도 협상 쟁점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다툼은 끊이지 않는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지금 민생 문제, 경제 위기, 안보 불안 등 각종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국회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한 뒤 “정국을 푸는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당의 양보안을 먼저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 합의안 전제 조건은 법사위가 상원처럼 균립해 모든 상임위의 주요 법안의 내용까지 관여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에서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꿔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

했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제한을 하지 않으면, 위원장 자리는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제한을 요구한 민주당에 지난 10일 “21대 전반처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자니 민심 이반이 두렵고,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돌려주자니 원죄가 있어서 빈 껌데기만 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한 경고성

메시지인 셈이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21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합의안 가운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제한이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에 “평범한 상임위로 역할 한다는 전제하에 법사위를 양보하는 합의안이었다. 법사위 위상을 바꿔 주든지, 바꿀 생각이 없으면 의석 비례에 따라 양보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법 개

정으로 행정입법 권한 통제에 나서려는 점을 강도 높게 비판한 뒤 원 구성 협상에 나서라고 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입법부로서 민주당이 시급히 즉각 해야 할 일은 국회 안에서 민생 해결을 위한 원 구성 협상에 즉각 나서는 행동”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요구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제한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인 셈이다. 민주당도

국민의힘에서 요구한 법사위원장 자리 양보를 사실상 거부하는 입장이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원 구성 협상을 시작했음에도, 쟁점 사항은 해결하지 못해 평행선만 달리는 상황이다.

다만 국회 공백이 길어지는 데 대한 여론 압박은 거세지고 있다. 당장 북한 무력도발을 대응하기 위한 국회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 소집조차 하지 못하면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이 일주일 넘어서는 상황에도, 관련 상임위 소집으로 대응할 수 없는데 대한 지적도 있다.

특히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전면 폐지’의 경우, 법 개정 사항이다. 국회가 책임져야 함에도 여야 갈등으로 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아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편 여야도 이 같은 상황에 공감하는 만큼,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원 구성 논의는 놓지 않고 있다. 별다른 협상 진전은 없어도, 원 구성 협상이 단절되면 여야 모두 여론의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 행안부 ‘경찰국’ 추진에 野 “독립성 침해”

경찰국, 31년 만에 부활 가능성  
野 “경찰 권한 확대 견제 의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서울 경찰청을 방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창룡 경찰청장. /뉴스시스

행정안전부(행안부)의 ‘경찰 길들이기’ 논란이 거센 후폭풍에 직면했다. 행안부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장관 사무에 ‘치안’을 추가하고 이를 실행할 ‘경찰국’ 신설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또한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 권한 확대를 견제하는 윤석열 정부의 의도가 숨어있다고 비판했다. 노태우 정부는 지난 1991년 군사 정권 아래 시민 기본권 침해 등 폐해가 많았던 경찰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에서 외청으로 분리한 바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취임 직후 꾸려진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지금까지 4차례 비공개 회의를 열고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내 비직제기구인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기구로 격상시켜 경찰 고위직의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도록 이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이들은 법무부 산하의 검찰국에 비해 경찰청은 조직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약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임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던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13일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행안부의 권한에 대해서 정부조직법 또는 경찰청법에 명시가 돼 있다. 그럼에도 경찰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이 내무부 안에 있으면 막강해진 힘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든지 자의적으로 행사한다고 해서 외청으로 분리해 행안부의 일반적 감독 권한을 없앤 것”이라며 “지금 와서 새롭게 한다고 하면, 정말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상민 장관이 6명의 경찰청장 후보를 직접 대면해 면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된 바 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의 제청권자인 하나 후보군을 직접 대면 면접한 것은 전례가 없었기 때문. 경찰 내부와 시민사회에선 대면 면접을 하면 정부에 충성 서약을 하는 후보자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경찰 간부 출신인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에 나와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이 장관을 통해 검찰과 경찰을 확실하게 장악해서 대통령 직할체제로 구축하겠다는 의미가 아닌가 싶다”고 추측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오세훈 서울시장-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 만남 13일 서울시장-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 서울과 경기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 민주 비대위 “유능한 野 될 것”... 쇄신 강조

국립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 시작

지난주 본격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3일 기독교인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유능한 야당’이 되겠다고 변화와 쇄신 의지를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아침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은 현충탑 앞에서 참배하며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방명록에 ‘유능하고 겸손한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비대위는 당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차기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계파 갈등 봉합, 대형 선거 패배 원인 분석 및 평가, 극단 팬덤 정치에 대한 노선 정리 등 산적인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

의석수 170석을 가진 ‘슈퍼 야당’ 민주당은 단기간에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야 하는 숙제도 안았다.

비대위원들은 현충원 참배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로 자리를 옮겨 가진 제1차 비대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변화와 쇄신을 약속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민생 문제, 경제 위기, 안보 불안 등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국을 푸는 책임은 정부 여당에게 있다. 야당도 한 축으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면서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여당의 양보안을 먼저 내놓아라. 책임감은 결국 여당의 양보안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당정을 겨냥하며 “민주당은 화물연대와 간담회를 갖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대상을 확대 하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뒤늦게 협상에 나섰으나 실무 교섭이라고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파업 중재는 뒷전인 채 의정 선출을 지연시켜 국회 정상화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태홍 기자

## 尹, 총리에 “기업 현장 애로 챙겨달라” 지시

>> 1면 ‘윤 대통령-한 총리’서 계속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경제계 간담회에서 이 같은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었다”며 “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 총리에게 당부했다”고 말했다.

또, 최근에 기업이 발표한 투자계획을 신속·가시화될 수 있도록 투자에 제

약이 되는 각종 규제개혁과 현장의 애로 개선 방안을 한 총리가 각별하게 챙길 것을 지시했다.

이 관계자는 “그 외에도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상당히 오랜 시간을 이야기 했다”며 “특히 물가 등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전 비공개로 이

뤄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와 주례회동에서 물가에 대한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이 나왔느냐는 질문에 “많은 (물가 안정) 이야기들이 나왔고, 대통령은 좀 더 구체적이고 실행단계에 들어가면 말할 수 있다”며 “조금 기다려 주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물가 안정 대책은 각 부처에서 발표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지시하면 각 부처에서 발표하는 게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